

文 “北과 비대면 대화” 다음날, 남북영상회의실 공고낸 통일부

“긴급히 추진-개최될 가능성 대비” 4억 예산 배정… 내달 2일까지 입찰 늦어도 4월중 공사 마무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에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하자”고 한 다음 날 통일부가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북한과 영상회의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내에 영상회의실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긴급 공고를 게시했다. 통일부는 입찰제안 요청서에서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대화의실에 남북회담 영상회의실을 구축해 남북회담, 관계 부처, 국내외 전문기관 간 언택트 협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예산 약 4억 원이 배정된 이번 사업을 위한 공사를 늦어도 4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입찰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공사는 계약 뒤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호응하면 어떤 방식이든, 언제든, 남북 간 대화가 가능하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이행하기 위해 부랴부랴 비대면 회의실 구축에 나섰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비대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이 문 대통령의 신년사 전에 이미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 측과 직접 만나는 대면 회담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계획을 추진했고 올해 통일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 부처 모두 상반기 중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공지가 있었다”며 “예정됐던 사업인 만큼 내부에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자고 해 오늘 바로 긴급 공고를 올렸다”고 했다. 통일부는 긴급입찰사유서를 통해 “남북회담의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영상회담이 긴급히 추진·개최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상회의실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가 영상회의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더라도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또 북한이 이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